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안전 번호	2023-21
----------	---------

제안일자 : 2023. 9. 18.

제 안 자 : 동두천시의회위원장 김승호

1. 제안이유

-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거의 절반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면서 70년 넘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음.
- 2004년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 이후 주둔 미군 병력 급감으로 인해, 그동안 주한미군 대상 서비스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동두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나아가 평택기지로의 미군 병력 이동은 그러잖아도 파탄에 이른 동두천 지역경제를 희생 불능 상태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함.
-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음.

2.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 산업단지 개발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결의함.
-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결의함.
- 대한민국 정부가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 전부를 책임질 것을 결의함.

3. 결의문(안), 성명서(안) 등 기타자료 덧붙임

- [붙임1]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붙임 1]

대한민국을 지켜 온 동두천이 절규한다!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안보 도시 동두천의 기다림과 인내는 폭발 직전이다. 동두천은 70년 넘는 묵묵한 안보 희생으로 상처받고 있다. 제발 살려달라는 동두천의 호소에는 메아리마저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이 순간도 동두천은 시 땅덩어리의 절반을 미군에게 내어주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절망뿐, 여전히 동두천은 지역경제 파탄의 수렁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의 아픔은 동두천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시 면적 절반이 미군 공여지인 상황에서, 각종의 중첩규제에 묶여 왔던 동두천은 미군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외에 자생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의 그늘에는 남북 대립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도맡아온 동두천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토 중 어딘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고, 단지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로 동두천은 미군의 요새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미군들이 빠져나간 동두천의 빈자리에는 폐업의 눈물과 불황의 한숨만 남았다. 낙후의 상처와 기지촌의 오명만 그대로, 동두천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인구 9만 선이 결국 무너진 동두천은 벼랑 끝, 추락 직전에 처해 있다. 이대로라면 동두천은 죽는다.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라는 것은 없다.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도 대가 없는 헌신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즉각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7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캠프 모빌을 비롯한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 전부를 책임지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3년 9월 18일

경기도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